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선호에 관한 연구

The Second Childbirth Preference of Married Women with a Child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팀장 한 은 주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박 정 윤

Dongjakg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e Leader of the Division of Family Education : Han, Eun Joo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istant Professor : Park, Jeong Y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arried women with a child perceived the low-fertility issue in order to increase the success of policy decision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e study subjects were 327 married women with a child who resided in Dongjak-gu, Seoul. After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1.5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rried women who already had one child found it ideal to have two children. In fact, however, 36.4% had determined not to have another child, and only one parent wanted to have a second child in 26.9%. Second, they took a dismal view of the government's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ies, and they considered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a more down-to-earth measure. Third, economic aid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was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way to boost the childbirth rate. In conclusion, current national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low-fertility rate are redundant if they are only designed to publicize government action. Actions need to be taken to assist married women in taking better advantage of the existing policies.

주제어(Key Words): 저출산(low-fertility), 출산장려정책(fertility encouragement policy), 출산률(childbirth rate), 자녀양육과 교육비 지원(economic aid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I. 서론

우리나라는 해방 전후 정치적 혼란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으나 1960년 전·후로 베이비붐이 연결됨에 따라 출산율이 6.0명으로 매우 높게 상승되었다(정구현, 2000).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자녀수에 대한 부담이 강조되면서, 가족계획사업의 홍보 및 교육과 피임보급 활동, 개인주의적 가치관 형성과 소자녀 규범의 정착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 시책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김승권, 2003). 그러나 최근 합계 출산율이 1.08명(2005년 기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미혼인구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이다(이선이, 2005).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되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문제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에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등(보건복지부, 2006) 저출산 대응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성별분업적 가족가치관이 잔재함으로써 파생되는 일과 육아 양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육제도의 보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사회의 보육 책임성과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 5세아 무상보육의 실시',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보육수당의 지급' 그리고 '취약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시설의 책임강조' 등과 같은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고 있다(백혜리, 2005). 또한 출산·모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체 등의 출산지원 모범 프로그램을 발굴 및 확산하고자 하며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소를 증설하고,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에게 시합관 아기 등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다양한 저출산 정책대안과 관련 대응책들은 실제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서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정책 중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정책의 대

표적인 것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에서도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김승권, 2003).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보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은 실효성에 많은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들이 그다지 빠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의 출산과 관련된 환경적 변화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실시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 역시 생애주기별로 차별화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다. 저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원인과 실태분석(김승권, 2002; 전광희, 2003; 이춘석, 2003;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운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상용, 이인재, 2005),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김승권, 2002, 2003; 백승홍, 2003; 옥선화, 2003; 유애광, 김인숙, 2002; 장혜경, 2003; 정민자, 2004; 최경수, 2003; 이삼식 외 14인, 2005; 장진경, 2005; 장혜경, 2005)으로 대별된다. 저출산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김승권, 2002, 2003; 이춘석, 2003)는 출산경험여부나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태도 분석(장진경, 2005; 옥선화, 2003)을 하고 있어 실제 그들의 출산여부와 출산율에 주는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경험을 가진 대상자의 출산에 대한 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산정책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서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출산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며(김승권, 2002, 2003; 김수연, 2004; 백혜리, 2005; 이삼식 외 14인, 2005; 장혜경, 2005) 이를 통한 이들 국가의 출산정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출산장려 정책과 대안은 수혜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할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2-3년간의 급속한 정책변화는 수혜 대상자들이 이러한 출산장려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효과성을 선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물적, 인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생애주기별 출산에 대한 태도, 현행 제도 내에서 효율성 향상 방안들이 시급하게 논의되

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 중 특히 자녀양육기의 출산경험을 가진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에 현행 국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둘째자녀 출산결정과 국가정책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이나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현 저출산 대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수혜자 입장에서의 현행제도를 평가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결정 여부와 이에 따른 이유를 분석한다.

둘째, 기혼여성의 현행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변인과 둘째 자녀 출산결정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넷째, 둘째 자녀 출산 결정 여부와 출산장려정책 인식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최근 2~3년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이삼식 외 14인, 2005). 저출산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을 종합하면 원인분석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방안에 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먼저 저출산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대체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 정리된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불충분한 보육시설, 핵가족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가 여성인구의 사회진출과 가족의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구정책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저출산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결혼의 매력의 감소하면서 결혼율의 저하, 만혼경향, 초혼연령 상승과 결혼관의 변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김승권, 2002, 2003; 박민자, 2004; 문제해결사례발표회, 2005). 즉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결혼당사자들의 행

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결혼의 매력이 감소하고 이는 결혼기피 현상을 낳게 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성별분업적 가족가치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추세와 이와 상반되는 전통적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의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즉 가부장성과 양성평등적 요인들이 공존(이삼식 외 14인, 2005)하면서 저출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저출산의 또 다른 요인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명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취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05) 가족실태 조사결과에서 출산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이 4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해결사례연구발표회(2005)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생태학적 접근으로 보육환경개선을 통해서 해결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질적 개선, 보육시설의 융통적인 운영, 보육수당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 자녀양육에 의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수, 2004).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할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등 소자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 가정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른 한편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저출산 현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일치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취업과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윤소영(2005)은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자녀임신의 경험이 여성취업활동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취업이 자녀임신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이들 간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유미와 곽혜경(2004)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저출산 원인이기보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전통적 역할태도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서구 연구(Hoem, Hoem, 1989; Hoffeeth, Deich, 1994; Dewit, Ravanera, 1998; Budig, 2003)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 외 천혜정(2005)은 저출산의 문제를 남녀 또는 부부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첫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선택의 개념이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유계숙, 정현숙, 2002), 둘째 자녀는 부부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면 부부의 연령, 결혼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상황, 여성의 취업, 이상 자녀수, 자녀관, 출산정책 인식의 차이 등이다(서한샘, 1998; 전광희, 2002; 한유미, 곽혜경, 2004; 천혜정, 2005).

이와 같이 저출산 원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저출산은 사회적 환경변화가 결혼양상을 변화시키고,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가정 양립 문제와 연결된 경제적인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혼자나 출산경험이 없는 기혼자는 결혼과 자체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자의 경우 저출산 요인이다를 것으로 예측되는바 선행연구에서는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부부의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 관련 연구의 또 다른 축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차경옥(2005)은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하고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상이라고 답하여 출산장려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과 정책입안자들이 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외부환경 및 조건을 개선해 주면 추가적인 출산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문제해결사례연구발표회(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면 서구 북유럽과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비교 분석하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법안(모성보호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공병호(2002)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한국 실정에 적절한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출산 정책이 일본과 유사함으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서구 정책방안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한국적 상황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제공자 중심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존재유무의 인식과 활용도,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실천방안이 모색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마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조사가 기간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D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고 있는 원아의 어머니이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한 총 32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김영주 등(2005)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

조사대상자의 이상적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관한 질문과 향후 추가 출산에 관한 부부간의 결정상태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가 둘째를 출산할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 가정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에 따른 이유 2문항을 구성하였다.

2)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 변인은 서소정(2005)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첫째, 현재 정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기혼여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함, 6문항)으로 척도의 Cronbach's α =.88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앞으로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장려정책 중 자녀출산을 한번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이 무엇인가(1문항)이다. 그 외 모성보호혜택(예: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수당, 직장탁아)의 경험 유무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PC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의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327)

변인	구분	명(%)	변인	구분	명(%)
연령	30세 이하	81(25.2)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2(10.4)
	31~35세	182(56.7)		200~300만원 미만	55(17.8)
	36세 이상	58(18.1)		300~400만원 미만	85(27.5)
		400만원 이상		137(44.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0(21.5)	양육비	30만원 이하	82(25.8)
	대졸(2년제 포함)	217(66.6)		31~50만원 이하	120(37.7)
	대학원졸 이상	39(11.9)		51~70만원 이하	62(19.5)
	무직 / 주부	61(19.4)		71만원 이상	54(17.0)
직업	판매직/서비스직/생산직	58(18.5)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9(12.3)
	사무직	97(30.9)		중	221(69.5)
	전문기술/관리직/전문직	98(31.2)		하	58(18.2)
주거 소유 여부	자 가	137(42.4)			
	전 세	150(46.4)			
	기 타 (월세 등)	36(11.1)			

* 합계의 차이는 결측치(missing data) 처리에 의한 것임.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기혼여성 327명이다.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는 기혼여성을 선정할 것은 이미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견해와 현재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56.7%(182명)가 '31~35세'였으며, 78.5%(256명)가 '2년제를 포함한'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전문, 기술직/관리직/전문직'(98명, 31.2%), '사무직'(97명, 3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직/주부'(61명, 19.4%)보다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자의 주거소유형태에 관한 결과, 46.4%(150명)가 '전세'로 살고 있었으며, 42.4%(137명)는 '자가'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주거소유형태는 자가와 전세의 형태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조사대상자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44.3%(137명)가 '4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첫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31~50만원 이하'(120명, 37.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소득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수준 만족도 조사결과 '중(보통이다)' 69.5%(221명), '하(만족스럽지 못하다)' 18.2%, '상(만족스럽다)' 12.3% 순으로, 보통의 만족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결혼연령과 결혼 몇 년 후 첫째 자녀

〈표 2〉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일반적 특성

(N=327)

변인	구분	N (%)
결혼연령	20세 - 25세	48(14.7)
	26세 - 30세	215(65.7)
	31세 이상	62(19.0)
	무응답	2(.6)
	평균값 (SD)	28.48세(3.69)
결혼 몇 년 후 첫째 자녀를 출산했는지의 여부	1년	163(49.8)
	3년 이내	111(33.9)
	그 이상	19(5.8)
	무응답	34(10.4)
	평균값 (SD)	2.03년(2.22)

를 출산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결혼연령은 28.48세로 나타났다. 즉 65.7%(215명)가 '26~30세'에 결혼을 하였으며, '31세 이상'이 62명(19.0%), '20~25세' 48명(14.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 몇 년 후 첫째 자녀를 출산했는지 조사한 결과, '1년 이내'가 163명(49.8%), '3년 이내'가 111명(33.9%)으로 조사대상자의 83.7%가 결혼 후 1~3년 사이에 첫째 자녀를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

조사대상자의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상적 자녀수, 둘째 자녀 출산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결정 여부, 이에 따른 이유, 적정 출산시기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보았다(〈표 3〉 참조).

우선 이상적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1명이 이상적이다'가 10.1%(33명)인 것에 비해, '2명이 이상적이다'는 66.4%(217

〈표 3〉 이상적 자녀수와 둘째자녀 출산 선호도

(N=327)

변인	구분	N (%)
이상적인 자녀수	1명	33(10.1)
	2명	217(66.4)
	3명	68(20.8)
	4명 이상	8(2.4)
	무응답	1(.3)
둘째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간의 결정여부	부부 모두 둘째출산을 원함	119(36.4)
	본인만 둘째출산을 원함	24(7.3)
	남편만 둘째출산을 원함	64(19.6)
	부부 모두 둘째출산을 원치 않음	109(33.3)
	무응답	11(3.4)
향후 둘째자녀 임신 시기 계획여부	6개월 이내	36(11.0)
	1년 이내	54(16.5)
	2년 이내	32(9.8)
	3년 이내	12(3.7)
	4년 이내	6(1.8)
	잘 모르겠다	37(11.3)
	무응답	150(45.9)

명)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20.8%(68명)의 응답자들이 '3명이 이상적이다' 라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의 87.2%가 2명 또는 3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둘째자녀 출산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4% (119명)가 '부부 모두 둘째출산을 원함'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비슷하게 33.3% (109명)가 '부부 모두 둘째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배우자 한 쪽만 추가 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26.9%로, 이들이 향후 둘째 자녀를 출산할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대자녀수와 현실적인 출산 자녀수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임신을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년 이내'가 54명(1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개월 이내'가 36명(11.0%)으로 나타나 '1년 이내'에 둘째를 임신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7명(11.3%)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의 1/4은 상황에 따라서 출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즉 정확하게 출산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양육 여건과 개인적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출산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욕구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산을 원하는 이유와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먼저 부부가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표 4〉참조), '과도한 사교육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 (90명, 27.5%)을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취업유지에 따른 어

려움' (42명, 12.82%), 3순위는 '자녀로 인한 개인적 시간, 활동 제약'(38명, 11.6%)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즉 이상적 자녀수를 2명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 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과 개인적 활동 및 시간의 제약이 출산 기피요인은 것은 본 조사대상자가 전업주부인 경우보다 맞벌이가 훨씬 많다는 점에 비추어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이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임을 알 수 있다.

〈표 4〉 둘째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

집 단	1순위	2순위	3순위
과도한 사교육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	90(27.5)	38(11.6)	31(9.5)
대리양육자의 부재	27(8.2)	32(9.8)	27(8.2)
취업유지에 따른 어려움	24(7.3)	42(12.8)	19(5.8)
좋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	12(3.7)	16(4.9)	28(8.6)
자녀로 인한 개인적 시간, 활동 제약	14(4.3)	36(11.0)	38(11.6)
건강악화에 대한 염려	8(2.4)	7(2.1)	13(4.0)
자녀에 대한 필요성 못 느낌	6(1.8)	4(1.2)	10(3.1)
원치않는 성별,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2(.6)	8(2.4)	8(2.4)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1(.3)	2(.6)	1(.3)
기 타	8(2.4)	1(.3)	2(.6)
무응답	135(41.3)	141(43.1)	150(46.1)
계	327(100.0)	327(100.0)	327(100.0)

〈표 5〉 둘째자녀 출산을 원하는 이유

집 단	1순위	2순위	3순위
형제자매의 필요성	151(46.2)	16(4.9)	5(1.5)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9(2.8)	38(11.6)	24(7.3)
아들의 필요상(가계 계승)	7(2.1)	9(2.8)	11(3.4)
주변(양가 친척 등)의 권유와 압력	6(1.8)	47(14.4)	20(6.1)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4(1.2)	23(7.0)	30(9.2)
노후에 대한 두려움	-	9(2.8)	3(.9)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	-	2(.6)	4(1.2)
종교적인 이유	-	2(.6)	2(.6)
사회적 책임감(저출산에 대한 우려)	-	9(2.8)	25(7.6)
기 타	-	4(1.2)	7(2.1)
무응답	150(45.9)	168(51.4)	196(59.9)
계	327(100.0)	327(100.0)	327(100.0)

〈표 6〉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N=327)

분 항	전혀 효과적 이지 않음	효과적이지 않음	보통이다	대체로 효과적임	매우 효과적임	무응답	평균값(SD)
출산 축하금 지급	112(34.3)	91(27.8)	76(23.2)	35(10.7)	10(3.1)	3(.9)	2.20(1.12)
아파트 우선 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38(11.6)	81(24.8)	99(30.3)	71(21.7)	37(11.3)	1(.3)	2.96(1.18)
자녀교육 비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21(6.4)	45(13.8)	97(29.7)	93(28.4)	69(21.1)	2(.6)	3.44(1.16)
산전 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24(7.3)	47(14.4)	76(23.2)	84(25.7)	91(27.8)	5(1.5)	3.53(1.25)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14(4.3)	50(15.3)	62(19.0)	108(33.0)	88(26.9)	5(1.5)	3.64(1.66)
불임치료 혹은 영구피임 복원시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2(6.7)	68(20.8)	104(31.8)	72(22.0)	55(16.8)	6(1.8)	3.22(1.16)

그러나 향후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5〉참조) ‘형제자매의 필요성 때문에’가 151명(46.2%)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2순위로는 ‘주변(양가 친척 등)의 권유와 압력’(47명, 14.4%)을 꼽아, 부부의 자녀출산이 부부 중심의 결정이기 보다는 자녀와 주변 가족의 강요된 가치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순위로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30명, 9.2%)로, 한 자녀의 만족스러운 양육경험이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표 6〉 참조),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3.64점), ‘산전 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3.53점)에 대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출산축하금 지급’(2.20점)에 대한 효과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 수요자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라고 보여짐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빈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사 대상자들이 항목별로 20%에서 50%까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정책방안들이 모두 효과적이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실행이 필요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둘째 자녀출산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중 자녀출산을 한번 이상 고려하

〈표 7〉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산장려정책

집 단	N (%)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지원	171(52.3)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36(11.0)
없 음	33(10.1)
보육 시설 확충	31(9.5)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29(8.9)
아동수당 지급	9(2.8)
부모 보험 제도 적용	6(1.8)
가족수당 지급	4(1.2)
불임치료 및 영구피임복원시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3(.9)
출산 축하금	3(.9)
무 응 답	2(.6)
계	327(100.0)

게 만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 한 결과(〈표 7〉 참조), 53.5%(230명)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기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인구학적 변인과 둘째 자녀 출산 결정의 관련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과 둘째 자녀 출산결정 여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8〉 참조), 연령($\chi^2=16.12^*$, $p<.01$), 주관적 경제수준($\chi^2=10.49^*$, $p<.05$)과 둘째 자녀 출산결정 여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집단간의 빈도를 살펴보면, ‘30세 이하’나 ‘31~35세’ 집단에 비해 ‘36세 이상’이 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결혼연령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지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표 8〉 인구학적 변인과 둘째 자녀 출산결정과 관련된성

		두 자녀 이상 출산결정 부부 모두 출산 원함	한 자녀 출산결정 (저출산)		χ^2
			한 배우자만 출산 원함	부부 모두 출산 원치않음	
연령	30세 이하	37(31.6)	20(23.3)	22(20.6)	df=2 $\chi^2=16.12^{**}$
	31~35세	70(59.8)	52(60.5)	55(51.4)	
36세 이상	10(8.5)	14(16.3)	30(28.0)		
계	117(100.0)	86(100.0)	107(1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20(16.9)	19(21.6)	27(24.8)	
대학원 이상	87(73.7)	56(63.6)	68(62.4)		
계	118(100.0)	88(100.0)	109(100.0)		
직업	무직/주부	18(16.1)	20(23.5)	19(17.9)	df=2 $\chi^2=4.02$
	판매직/서비스직	17(15.2)	16(18.8)	23(21.7)	
사무직	38(33.9)	26(30.6)	32(30.2)		
전문기술직/관리직	39(34.8)	23(27.1)	32(30.2)		
계	112(100.0)	85(100.0)	106(100.0)		
주거 소유 여부	자가	49(41.2)	38(44.7)	47(43.5)	df=2 $\chi^2=4.22$
	전세	59(49.6)	40(47.1)	44(40.7)	
기타(월세 등)	11(9.2)	7(8.2)	17(15.7)		
계	119(100.0)	85(100.0)	108(100.0)		
소득	200만원 미만	8(7.0)	9(8.9)	14(14.3)	df=2 $\chi^2=5.60$
	200~300만원 미만	19(16.5)	14(16.3)	19(19.4)	
300~400만원 미만	36(31.3)	25(29.1)	20(20.4)		
400만원 이상	52(45.2)	38(44.2)	45(45.9)		
계	115(100.0)	86(100.0)	98(100.0)		
양육비	30만원 이하	26(22.2)	23(27.1)	31(29.2)	df=2 $\chi^2=6.54$
	31~50만원 이하	44(37.6)	35(41.2)	38(35.8)	
51~70만원 이하	30(25.6)	13(15.3)	16(15.1)		
71만원 이상	17(14.5)	14(16.5)	21(19.8)		
계	117(100.0)	85(100.0)	106(100.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7(14.7)	10(11.6)	10(9.4)	$\chi^2=10.49^*$
	중	86(74.1)	62(72.1)	67(63.2)	
하	13(11.2)	14(16.3)	29(27.4)		
계	116(100.0)	86(100.0)	106(100.0)		

* $p<.05$ ** $p<.01$ *** $p<.001$ 합계의 차이는 결측치(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알 수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에 상관없이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상')보다 낮은 집단('하')이 저출산을 결정한 경우가 더 많은 점에 비추어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자녀출산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둘째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경제적 부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족 내의 주관적 경제 만족도 정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좀 더 해석해 보자면 모든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만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개별가족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밝히고 이를 지원할 때 출산이 조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둘째 자녀 출산 결정과 출산장려 정책 인식과의 관련성

조사대상자의 둘째 자녀 출산 결정여부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불임치료 및 영구피임 복원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제외한 다섯 가지 정책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항목별 차이를 살펴보면 '저출산을 결정' 한 경우보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결정' 한 경우, '출산축하금 지급' ($F=7.54^{***}$, $p<.001$), '주거 지원 강화' ($F=4.38^*$, $p<.05$), '자녀교육비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F=5.78^{**}$, $p<.01$),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F=4.67^*$, $p<.05$),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F=3.76^*$, $p<.05$) 정책 모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표 9〉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인식의 차이

구 분		1			2			3			4			5			6		
		M	F값	D	M	F값	D	M	F값	D	M	F값	D	M	F값	D	M	F값	D
두자녀 이상 출산 결정	부부 모두 출산 원함	2.50		A	3.21		A	3.73		A	3.81		A	3.88		A	3.41		
한자녀 출산 결정 (저출산결정)	한배우자만 출산원함	1.93	7.54***	B	2.90	4.38*	AB	3.30	5.78**	B	3.40	4.67*	B	3.56	3.76*	B	3.16	2.49	
	부부 모두 출산원치 않음	2.11		B	2.77		B	3.27		B	3.36		B	3.49		B	3.08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5$ ** $p < .01$ *** $p < .001$

- | | | |
|---------------------|----------------------|----------------------------|
| 1. 출산축하금 지급 | 2. 주거지원 강화 | 3. 자녀교육비지원 및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
| 4.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5.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 6. 불임치료, 영구피임복원기술에 건강보험 적용 |

〈표 10〉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에 따른 모성보호혜택 경험유무

변 인		두 자녀 이상 출산결정		한 자녀 출산결정 (저출산 결정)		χ^2
		부부 모두 출산 원함	한 배우자만 출산 원함	부부 모두 출산 원치않음2		
육아 휴직	혜택경험 있음	18(19.1)	11(15.1)	11(12.6)		df=2 $\chi^2=1.48$
	혜택경험 없음	76(80.9)	62(84.9)	76(87.4)		
	계	94(100.0)	73(100.0)	87(100.0)		
출산 휴가	혜택경험 있음	54(52.4)	27(35.1)	40(42.6)		df=2 $\chi^2= 5.54^*$
	혜택경험 없음	49(47.6)	50(64.9)	54(57.4)		
	계	103(100.0)	77(100.0)	94(100.0)		
육아 수당	혜택경험 있음	15(16.1)	5(7.0)	15(16.9)		df=2 $\chi^2= 3.84$
	혜택경험 없음	78(83.9)	66(93.0)	74(83.1)		
	계	93(100.0)	71(100.0)	89(100.0)		
직장* 탁아	혜택경험 있음	0(0.0)	2(2.8)	1(1.2)		df=2 $\chi^2= 2.53$
	혜택경험 없음	86(100.0)	69(97.2)	84(98.8)		
	계	86(100.0)	71(100.0)	85(100.0)		

* $p < .05$ 합계의 차이는 결측치(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있었다. 즉 저출산을 결정한 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부부가 향후 자녀를 더 출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제 공자들은 다른 생애주기의 대상자와 (예: 미혼남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기혼남녀 등)와는 또 다르게 이미 한 자녀를 출산한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성보호혜택의 경험 유무와 둘째 자녀 출산 결정 여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표 10〉 참조),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난 모성보호혜

택은 '출산휴가' ($\chi^2=5.54^*$, $p < .05$)의 경험 유무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만 출산을 원하거나(64.9%), 부부 모두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57.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모성보호혜택 경험은 둘째 자녀 출산결정 여부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우리 사회는 출산을 저하와 고령 사회의 도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

* 직장탁아의 혜택경험유무와 출산결정관련성 분석은 직장탁아 집단별 사례에서 교차분석에 무리가 있으나 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 대안으로서, 수요자 입장에서 출산에 대한 태도와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 372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둘째 자녀를 출산할 지에 대한 부부간의 결정을 조사하고, 이것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이상적 자녀수를 살펴본 결과, 66.4%(217명)가 '2명이 이상적이다'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1명이 이상적이다'라고 한 경우는 10.1%(33명)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의 2명 중 1명이 두 자녀(46.4%)를 이상적인 자녀로 여긴다는 연구결과(여성가족부, 2006)보다 좀 더 두 자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2명 이상의 자녀가 이상적이다'라고 한 경우가 89.6%인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사대상자들의 약 90%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 모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결정한 경우는 36.4%(119명)였으며, '부부 모두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가 33.3%(10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결정의 가능성이 높은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둘째 자녀 출산을 원치 않은 경우'가 26.9%(88명)로 나타나, 이상적 자녀수와 달리 현실적인 자녀수 선택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둘째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사교육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 (90명, 27.5%), '취업유지에 따른 어려움' (42명, 12.8%)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경제적 요인과 맞벌이 부부의 일과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 저출산과 큰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혼여성들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인식은 높은 반면, 자녀출산 및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자녀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관과 실제적인 출산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괴리감은 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보호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의 생애주기를 경험하고 있는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장려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3.64점)의 효과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

행한다면 자녀출산을 고려해 보겠는지를 조사한 결과, 52.3%(171명)가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을 꼽았으며,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36명, 11.0%)을 두 번째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현재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것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가정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물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만 5세아 무상보육의 실시', '취약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시설의 책임강조' 등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의 보육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기혼부부들로 하여금 자녀출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수당, 직장탁아)의 경우 실제로 기혼여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만 있지 그 실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안들에 대해 실제적인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은 확실적이고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이라고 여기고 있음으로 이러한 소극적 대처보다는 개별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의 부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자녀양육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보육과 부분적인 의료적 혜택을 주는 것에 국한하기보다는 교육부의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2005)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어린 시기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아버지 육아휴직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2%, 7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 적정기간으로 출산휴가 7일, 육아휴직 4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만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부부 중 한명이 출산과 관련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향후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이 높은 10대 또는 20대 연령층의 남녀(장진경, 2005)들이 자녀출산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대안이 될 것이라 여긴다.

셋째,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은 '형제자매의 필요성(151명, 46.2%)'과 '주변의 권유

와 압력(47명, 14.4%)을 꼽았다. 이는 외동자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형제자매를 통해 집단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가치관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한국사회의 자녀출산 문제가 부부 당사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 외의 가족 및 타인들의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필수적이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가족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결혼 전부터 남편이 부모됨 또는 부모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던 가치관의 압력이 아닌 부부가 자녀출산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고 낳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와 한 쪽 배우자만 찬성한 경우 그리고 부부 모두 한 자녀로 출산을 끝내겠다고 결정한 경우 이들의 인구학적 변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 여부, 모성보호제도 혜택의 경험 여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 35세 이하의 집단보다 36세 이상의 집단이 저출산 가정(1명의 자녀만 됨)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을 선택하는 집단은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하겠다고 한 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벌고 있고, 현재 한 명의 자녀에게 쓰는 양육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불임치료, 영구피임 복원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한 5가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매우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의 혜택 중 출산휴가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 자녀출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들이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혼여성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매체와 시민단체, 민간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등과 같은 정부, 기업, 민간이 모두 현재 만들어진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 내 보육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대상별 저출산 요인의 분석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 현재 이용가능성이나 효과 면에서 미흡한 정책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을 배제하고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출산선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혼남녀의 비교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병호(2002). 일본의 저출산율에 대한 정책고찰. *한국여성교양학회지*, 9, 35-54.
- 김수연(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12, 6-21.
- 김승권(2003).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49-73.
- 김승권, 최병호, 정경희, 이삼식, 박덕규, 박인화, 장지연(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정책보고서 2002-4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주(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49-157.
- 백승홍(2003).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소고. *국회보통권*, 442, 25-27.
- 백혜리(2005).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제언. 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 「줄어드는 인구 늘어가는 인구」, 65-76.
- 변화순(200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의 방향. 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 「줄어드는 인구 늘어가는 인구」, 51-61.
- 보건복지부(2006).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6.
- 서소정(2005). 저출산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내 비교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27-136.
- 서한샘(1998). 출산력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여성가족부(2005). 2005 전국가족실태조사보고서.
- 옥선화(2003). 20~30대 기혼남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지각수준과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세미나집, 27-46.
- 유계숙, 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 39-47.
- 유애광, 김인숙(2002). 한국의 출산문화와 정책대안. *김천과학대학논문집*, 28, 39-61.

- 윤소영(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9-166.
- 이문영, 김재문, 박수진, 정태성, 김신(2005). 최근 한국의 출산율 현황에 관한 고찰. 대한소아치과학회지, 32(2), 300-305.
-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희식, 이성용, 이인재(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이선이(2005). 저출산과 젠더.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지원토론회, 「줄어드는 인구 늘어가는 인구」, 25-47.
- 이춘석(2003).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3-24.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 장혜경(2005).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사례. 국회도서관보 42(12), pp. 13-23.
- 전광희(2003).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3, 305-323.
- 정구현(2000). 한국의 출산력 추이 및 전망. 통계연구, 5(2), 121.
- 정민자(2004).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방안-저출산·고령화시대의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 35-71.(2006), 2006 여성지도자 교육,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료집.
- 차경욱(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천혜정(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4.
- 최경수(2004).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추이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저출산 시대의 신 인구정책」 자료집.
- 통계청(2005). 한국의 사회지표.
- 한유미, 광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0.
- Budig, M. J.(2003). Are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history interdependent? An examination of causal order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32(3), 376-402
- Dewit, M., Ravanera, Z. (1998). The changing impact of women's educational attachment on the the timing of Canada.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25, 45-67.
- Hoem, B., Hoem, J. M. (1989). The impact of women's employment on second and third births in Sweden. *Population Study*, 43, 47-67.
- Hofferth, S. L., Deich, S. G. (1994). Recent U. S. child care and family.

(2006년 5월 27일 접수, 2006년 9월 15일 채택)